

이대론 소멸...지방대학 살아야 지역 살리고 청년 유출 막아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6>지방대학 무상교육 도입 시급

광주·전남의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 지역균형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선 지방대학 무상교육 등 파격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선 순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의 최근 10년동안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15~29세) 변화 비율은 2010년 22.27%에서 2020년 20.10%로 2.17%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는 32만 3902명에서 29만 1413명으로 3만 2489명이 줄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0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광주·전남 청년 수도권 유출 심각
대학 진학·양질의 일자리가 원인
정부 수도권 대학 위주 지원 되풀이
'지역 국립대 무상' 대선공약도 나와

있다는 점이다. 청년 인구비율을 보면 2011년 21.93%, 2012년 21.57%, 2013년 21.35%, 2014년 21.22%, 2015년 21.19%, 2016년 21.11%, 2017년 20.86%, 2018년 20.68%, 2019년 20.42% 등 한해 도 빠지지 않고 내리막이다.

전남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남은 2010년 청년 인구 비율이 18.04%에서 2020년 15.55%로 2.49%p나 줄었다. 청년수로 따지면 34만6187명에서 28만7888명으로 5만8299명의 청년이 고향인 전남을 떠났다.

광주·전남을 떠난 청년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호남권에서 지난해에만 2만782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청년이 떠나면서, 광주·전남의 청년 고용률도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2013년 당시 전국 평균은 39.5%, 광주는 33.9%, 전남은 38.0%였다. 7년이 흐른 2020년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42.2%였으며, 광주(39.6%)와 전남(37.9%)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전남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지역 잔류율도 50%대 초차 넘지 못했다. 지역 대학 졸업자 2명 중 1명은 수도권 등으로 떠나는 의미다.

지역 미래를 이끌 청년 인구의 감소는 대학진학과 취업 등을 위한 '수도권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지역 청년인재의 외부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청년인재의 수도권 이동을 막아만 국가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공공재정 투입과 지방대학의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민간투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 양질의 일자리가 비수도권에서 선순환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매년 수도권 대학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편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19년 수도권과 지방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교(73개교)는 학교당 평균 336억 5100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지방대학교(125개교)는 185억 24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특히 호남권 소재 2개 국립대학(전남대, 전북대)의 2018년 재정지원액(1842억원)은 고려대학교 1개 대학 재정 지원액(2179억원)에도 못 미쳤다.

이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대학들에선 정부의 현 수도권 대학 편중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재정지원액도 대폭 확대해 지방 명문 국립대학 확립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수도권 사립 대학 정원 및 재정지원액을 감축하는 한편 지방 중·소규모 대학에 대해선 지역특화 산업과 맞춤형 특성화한 감소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방 전문대학은

지역민 평생교육의 장과 일자리 전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듯 대선 공약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교육 공약을 내놨다.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등록금 무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로 고려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거점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과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대규모 산학협력 특화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 문연희 연구원은 "청년 유출의 주 원인은 대학진학과 취업"이라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파격적 재정지원만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의 이동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재정 연 5조3천억원 늘린다

정부, 재정분권 세부방안 확정

지방소비세율 4.2% ↑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신설

지자체 세출 자율성 확대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원을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을 매년 5조원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또 주거복지 위한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 개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하는 등 지방 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 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당정이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은 ▲지방소비세 4.3% 포인트 인상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기초지자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지방비 부담 2000억원 완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 포인트(4조1000억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기능이양(2조3천억원)

등을 선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따른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대 4다.

이에 더해 1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배분 비율은 광역과 기초가 25대 75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원가량 덜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능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재정 혁신방향'도 발표했다.

코로나19 같은 위급한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는 등 예산편성기준도 완화된다.

지역개발사업은 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투자심사 제도상의 중복 절차를 없앤다. 현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예타 조사를 면제받으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밖에 지방기금 관리·운용 민간위탁 허용, 재난대응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략,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상향조정, 이월예산 집행잔액의 회계연도 중 활용,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보조사업 부담 자율심의기구 설치 등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세부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재정분권 개선...전남도 4년간 2조4000억원 보전"

전남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재정분권 개선안이 11일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폭 반영됐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보전할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 3조6000억원이 2026년까지 4년간 연장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당초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이 2023년부터 연간 60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약 2조4000억원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균특 점유율이 높은 농어촌 등 비수도권도(道) 지역은 균특회계 재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을 대폭 축소 또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정부, 국회, 당·정·청협의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전남도의 재정 현황과 어려움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했다. 지난 7월에는 전남도 주도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와 함께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안은 지역소멸위기에

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소멸위기에 지역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록 1조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당면한 지방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면 낙후지역 지자체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소멸지역 특별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북도와 연대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발의 하도록 주도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